

에너지 R&D 시스템 전면 개편

내년부터 에너지 R&D의 과제선정 시 사업화와 지재권 평가 비중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PD의 기술적 편향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이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 R&D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년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 과제에 적용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개편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R&D의 기획·평가·관리 측면에서 사업화를 저조, 중복과제 지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부 개편안은 ▲사업화 촉진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R&D 전주기 과제 중복 방지체계 마련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이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R&D 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 비중을 기존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고 최종평가지 '기술성 평가'는 사업 시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중복과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 체크시스템을 마련하고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PD1인의

기술적 편향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을 구성, PD 기획안의 목표수준·과제 중복성·특히 확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전담기관-PD로 구성된 '에너지 R&D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민간 R&D 수요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전력 200만kW 이하뎀 재난문자 발송”

앞으로 예비전력이 2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6일 전국적인 정전사태의 재발을 막고 비상시 국민들의 절전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안 일부를 공개했다.

한전은 예비전력이 200만kW 이하로 떨어질 때, 순환 정전 시행이 확정될 때, 순환 정전이 시행될 때 등 세 가지 경우에 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보내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 또한 자막 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간 전력 수급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도 설치됐다. 한전은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주파수 정보 시스템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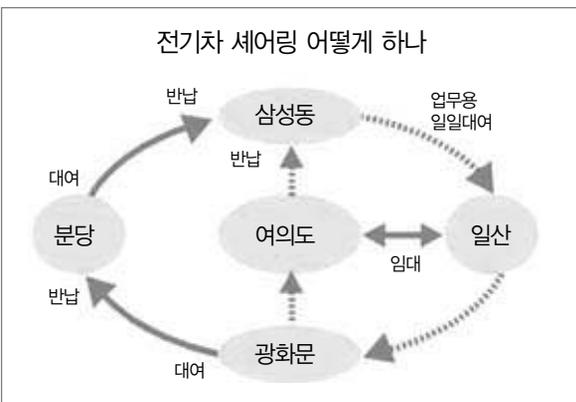
택시 타듯 전기차 빌려 타세요

- 내년 7월부터 카셰어링 사업
- 시간 단위로 요금 계산

수도권에 빌려 타는 전기차가 선보인다. 지난달 17일 지식경제부는 내년 7월부터 전기차를 이용한 '카셰어링(Car Sharing)' 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음 달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차 대여는 회원제이고,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평일 출근 때 주거지역 근처 보관소에서 차를 빌려 탄 뒤 회사 인근에서 반납하고, 퇴근할 때 다시 대여하는 식이다. 사업자에 따라 주말에는 일반 렌터카처럼 하루 이상 대여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수도권 중심가와 환승 주차장, 소포물 등에 최소 10곳의 지점을 두고 전기차 20대 이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청 등에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환경에 맞는 보급형 충전기도 개발한다.

지경부 장관에 홍석우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홍석우 KOTRA 사장을 내정했다. 최종경 지경부 장관이 대규모 정전 사태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교체 인사다.



홍 장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지경부에서 27년간 근무한 직업 관료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뒤 미국 컨설팅회사인 AT커니의 한국지사 부회장을 거쳐 올해 6월 KOTRA 사장에 임명됐다.

홍 내정자는 1998~2000년 주미대사관 상무관을 지내며 당시 워싱턴에 가 있던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중기청장 시절 각종 행사와 정책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우 내정자 △충북 청주(58)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부산·울산 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중소기업청장

주요국 原電 계속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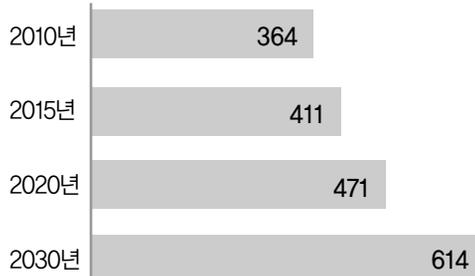
3·11 동일본 대지진 사고가 터진 지 8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주요 국가들은 원전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고민 끝에 도출한 결론은 안전은 강화하되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한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원자력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닌 대체에너지가 없다는 점이 이 같은 결론을 낳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세계적으로 원전 유지라는 틀은 깨지지 않고 있다. 원전 운영 국가 중 원전 폐쇄를 결정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두 나라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본부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서는 안 된다"면서 원전 유지를 선언했다.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도 원전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다.

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원자력협회(WNA) 등 국제기구는 원전 설비 전망치를 후쿠시마 사고 이전보다 낮춰 잡고 있지만 대폭적인 감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N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30년 세계 원전시설 용량이 지금보다 70% 증가한 614GW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IAEA는 같은 기간 50~120%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노 총장은 원전 수가 2030년까지 최대 350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EA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세계 원전
(단위 GW 발전시설용량)



※ 2015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 세계원자력협회(WNA) 9월 보고서